"이전 후보 지역과 통합적 협력구도 형성 후 추진해야"

국회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토론회…무슨 얘기 오갔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은 '통합적 협력구도 형성 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 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있는 대구 군공항 문제와는 달리, 아직 희망 지역이 없는 광주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는 해당 지자체들과의 협력 구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 지 선정 정책 토론회'에서 단국대 김학린 교수는 "최 종적 결정권이 주민에게 있고, 이전부지 선정 절차 는 단계별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와 합의 에 의해 진행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구의 경우 군위군과 의성군이 군 공항 이전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밝혀 경쟁구도 속에서 공항 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면서 "반면, 수원의 경우 이전건의서 제출 및 타당성 승인 통보는 가장 먼저 이루어졌지만 이전부지 지자체장(화성)과의 협의를 충실히 하지 않고 예비이 전후보지를 선정 발표함으로써 이후의 어떠한 이전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선례를 감안하면 광주 군공항이전은 대구, 수원의 경우와는 다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 군 공항이전문제는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없어 대구의 경험을 따라갈 수 없으며, 또 수원은 예비이전후보지가 강력하게 반발해 더이상 군 공항이전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 교수는 "통합적 협력구도를 형성한 뒤 광주 특유의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 준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진지한 토론과 통

이해관계자 토론·대안 창출 노력 필요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기회 인식돼야 이전 후보지 개발 특단의 대책 마련을

합적 대안 창출을 위한 대담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 하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 차원의 노 력만으로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기에 이를 확대 해 시민사회 차원의 논의와 대안 창출을 위한 가열 찬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통합적 협력'에 대한 주문이 줄을 이었다.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류일영 자문 위원도 "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광주군공항 이전은 전남·광주 상생발전의 기회로 인식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구갑) 의원은 "주민의 기본권, 생명권,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국방부의실질적인 행동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서구을) 의원은 "광주 군공항이전은 150만 광주 시민의 염원이자, 광주·전남 시도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는 상생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산구갑) 의원은 "해답은 바로 상생에 있다"며 "광주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전남에 큰 이익이 되거나, 전남이 약간 손해를 보더라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오른쪽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 광주에 큰 이익이 된다면 '큰 이익'을 위해서 약간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같은 당 권은희(광산구을) 의원도 "광주·전남 상생을 위해서는 이전후보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유인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미래 먹거리' 인공지능 산업 날개 달았다

AI권위자 김문주 박사 기술고문 위촉 에스브이테크넷과 기술협력 양해각서

광주시가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육성중인 인공지능(AI) 산업이 날개를 달게됐다. 광주지역 주력 산업의 혁신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AI 산업기를 마련을 위해 세계적인 AI권위자를 기술고문으로 위촉하고 특허 기술 협력 등의 물꼬를 텄기때문이다. 〈광주일보 6월3일자 2면〉

광주시는 4일 광주시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 권위자인 김문주 박사를 명예기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또 김 박사가 대표로 있는 에스브이테크 넷, 유에스에이(SVTechNet, USA)와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명예기술고문으로 위촉된 김 박사는 앞으로 광주시 인공지능 사업의 정책수립과 핵심기술 기업이전, 실리콘밸리와의 네트워킹 등 인공지능 중심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 박사는 현재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컨설턴 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이비엠(IBM)에서 28 년 간 슈퍼컴퓨터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해오는 등 세계적인 AI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인공 지능 하이브리드 멀티코어 반도체 칩 개발 등 AI 관련 특허 19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광주시와 에스브이테크넷, 유에스에이 (SVTechNet, USA)이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 광주시가 추진 중인 AI사업의

■ 포함내역: 크루즈 객실 및 다양한 선상 프로그램, 선내 뷔페 및 레스토랑 정찬식, 선내 이벤트 및 부대시설 이용, 다양한 쇼프로그램관람(일부 유료시설 및 쇼 제외), 미 팅/샌딩 포함, 크루즈 전문인솔자 동행, 선박TAX, 해외여행자보험

택관광(선택관광지에 따라 상이 / 홈페이지 참조), 일본 국제관광 여객세 \$10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 광주 산업 생태계의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AI사업의 계획수립, 기술획득, 실리콘밸리와의 네트워킹 등의 전반적인 사항 자문 ▲'인공지능(AI) 하이브리드 멀티코어' 관련 특허 의 시범적용(PoC)과 응용활용에 대한 연구개발 상호 협력 ▲광주시와 실리콘밸리 생태계 간의 상 호협력을 촉진 추진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광 주시와 실리콘밸리 간 협력 촉진을 모범사례로 추 진 ▲향후 실리콘밸리 에코시스템과 협력을 통해 광주의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협력 등이다.

광주시는 이번 명예기술고문 위촉 및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김문주 박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인 인공지능 특허를 이용해 기술을 선점하고, 인 공지능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AI)칩 분야 설계 등 핵심기술을 지역 기업에 공급해 인공지능(AI) 융합 제품으로 고부가가치화 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주 박사는 이날 "광주에 처음 와 여러 기업 ·기관 관계자를 만나면서 광주가 4차 산업혁명 선 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기술협력이 광주발전에 도움이 되 고, 광주가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인공지능, 수소경제,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박문주 박사님과기술협력을 하게 돼 광주로서는 좋은 기회를 얻게됐다"며 "광주시는 이를 잘 활용해 광주가 대한민국의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2,990,000원부터 [+170/180유로 선택관광 있음] ❷

서부 지중해 (남프랑스/스페인/이태리) ▶6/21~ 매주 금 출발 동부 지중해 (그리스/크로아티아/이태리) ▶6/28~ 매주 금 출발

●유럽 NO.1 코스타 크루즈 탑승, 밀라노 추가 관광 + 일급호텔 숙박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文대통령 "보훈은 국민통합 구심점…보훈가족 보듬는 정부될 것"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오찬 "국가유공자 가족·후손까지 합당한 예우·지원 늘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평화가 절실한 우리에게 보훈은 제2의 안보"라며 "보훈이 잘 이뤄질 때 국민의 안보의식은 더욱 확고해지고 평화의 토대도 그만큼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충일을 이틀 앞둔 이날 국가유공 자 및 보훈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행 사에서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품위를 높이고 국가 스스로 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훈은 국민통합의 구심점으로, 정부는 작년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독립·호국·민주를 선양사업의 핵심으로 선정했다"며 "독립·호국·민주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애국의 세 기둥"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가족· 후손까지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 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행사에서 박희모 6.25 참전 유공자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며 "국가유공자와 가족이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예우·지원을 늘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두 배 이상 인상했

2양차 특별공연 / 가수 홍서범 & 조갑경

다. 생활조정수당도 대폭 증액했고 지급 대상도 5· 18 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할 예 정"이라며 "유가족의 취업·창업 지원과 함께 주거지 원·채무감면 등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 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는 복무 중의 장애로 고통받는 상이자와 가족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순직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사망보상금과 유족연금을 현실화했고, 올해는 순직 군인의 보상을 상향하기 위해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충분히 의료지원을 받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 공자가 생전에 안장 자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사전 안장심사제도도 올 7월부터 새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며 "국가유공자가 우리 곁에 계실 때 국가가 할 수 있는 보상·예우를 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투 입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마음을 보듬는 정부 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가격포함내역 크루즈 선실료 및 항구세,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 가이드/기사경비 [인전경보단계] ●여행유의 / ●이용유 / ●여행유의 / ●이용유 / ●여행유의 / ●여

콰미어타